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55
----------	------

제출연월일: 2021. 9.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민이 입은 피해의 범위에 ‘사고’를 포함하여 구민이 사고로부터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나. 보험계약 기관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추가하여 보험계약 대상의 선택의 폭을 넓힘(안 제2조)
- 다. 보험금 지급 청구인에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을 추가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라. 조례에 사용된 불분명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법령에서 쓰이는 용어로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8. 19. ~ 9.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를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로, “구민”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으로, “생활안전보
험”을 “생활안전보험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으로”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로, “구민”
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호 중 “보험회사”를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
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한다.

제5조 후단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
른 수급자”로 한다.

제6조 중 “지급한다”를 “납입한다”로 한다.

제8조 중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 약관”을 “입은 피
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험약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
한다)”를 “피보험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일상생활</u>	제1조(목적) -- <u>조례는 「재난 및</u>			
<u>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u>	<u>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u>			
<u>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u>	<u>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u>			
<u>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u>	<u>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u>			
<u>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u>	<u>구민---- 생활안전보험 운영---</u>			
<u>함을 목적으로 한다.</u>	<u>-----.</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			
같다.	---			
1. “생활안전보험”이란 <u>재난으</u>	1. ----- <u>재난이나</u>			
<u>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보상</u>	<u>그 밖의 각종 사고로---</u>			
<u>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u>	<u>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u>			
<u>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u>	<u>이라 한다)-----</u>			
<u>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u>	<u>-----.</u>			
<u>한다.</u>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	2. -----			
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u>보</u>	----- <u>기</u>			
<u>험회사</u> 를 말한다.	<u>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u>			
	<u>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u>			
	<u>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u>			
	<u>방재정공제회---</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			
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	-----			

<p>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u>국민기초생활수급 자</u>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 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생활안전 보험 외에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p> <p>제6조(보험료 납입) 구는 보험료 를 보험기관에 직접 <u>지급한다</u>.</p> <p>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u>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u> 는 <u>보험 약관에</u> 규정된 범위에 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 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p> <p>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 관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 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 를 입은 <u>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u>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 된 보험금을 지급한다.</p> <p>② (생 략)</p>	<p>----- ----- ----- --. ----- 「<u>국민기초생활 보 장법</u>」에 따른 수급자 ----- ----- ----- -----.</p> <p>제6조(보험료 납입) ----- ----- <u>납입한다</u>.</p> <p>제8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 ----- <u>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u>는 <u>보험약관</u>----- ----- -----.</p> <p>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 ----- ----- ----- <u>피보험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생활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
 - 추계방법
 - 세입: 해당없음
 - 세출: 1차년도 이후 보험료 인상을 감안하여 연 3% 증가 예상액 추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구분	세출						
	보험료	210,000	216,300	222,789	229,473	236,357	1,114,919
□ 총 비용		210,000	216,300	222,789	229,473	236,357	1,114,919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구분	구 비						
		210,000	216,300	222,789	229,473	236,357	1,114,919
합 계		210,000	216,300	222,789	229,473	236,357	1,114,919

5. 덧붙이는 의견: 실제비용 및 연도별 보험료 산정은 보험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변동 가능
6. 작성자: 성동구 안전관리과 행정7급 박대웅(02-2286-6496)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1. 추계방법: 1인당 보험료 x 대상 인원(명) = 총 보험료
 - 성동구 인구수: 300,000명
 - 보험 보장내역: 상해사고에 따른 상해의료비
 - 사고발생시 응급비용, 구급차, 입원비, 전문 간호비,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비, 장례비 등
 - 보장한도: 1,000,000원
 - 성동구 생활안전보험료: 구민 1인당 연간 보험료(700원) ×
대상 인구수(300,000명) = 210,000,000원

< 관 계 법 규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